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변화와 한일관계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노다 정권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의 정책 파이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민주당은 관료우위에서 벗어나 정치우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치가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은 한일관계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사문제에서는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목 차

1. 문제제기
2. 민주당 정권의 구조적인 한계: 간 총리의 리더십 약화
3. 노다 정권의 정치적인 변화
가. 노다 정권이 탄생하면서 정치적인 변화
4. 노다 정권의 난제
가. 증세: 부흥세와 소비세
나. 외교정책: 환태평양경제 연제협정(TPP)와 미일 관계(후텐마 문제)
5. 노다 정권과 한일관계
6. 결론: 민주당 정권의 국내정치적인 제약
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한일관계

1. 문제제기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원전사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의 사태 수습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였음. 민간 차원에서 908억원의 성금 모금 및 구호물품을 마련하여 일본을 지원하였음.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음.
-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역사, 공민) 검정 결과, 독도 기술이 악화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이함.¹⁾ 그 해 7월 일본정부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와 함께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함. 특히 울릉도 방문을 계획한 의원들은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일관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까지 감행함으로써 한국에게 충격을 주었음.
- 이 글에서는 간 정권 이후 노다 정권을 중심으로 일본정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1) 과연 노다 정권은 앞으로 얼마간 지속할 것이며,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하토야마와 간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여기에서는 간 정권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민주당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할 것임. 2) 노다 정권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다 총리의 정치적 변화는 이전의 민주당 정권과 어떤 차별성을 가졌는지를 살펴봄. 3) 그리고 노다 정권하 한일관계의 장래를 예측해 보고자 함.

2. 민주당 정권의 구조적인 한계: 간 총리의 리더십 약화

- 간 총리의 리더십 약화에 따른 일반 국회의원들의 외교에 대한 통제 불능은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강함. 물론 전임자인 하토야마가 잦은 말실수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음. 그 대표적인 예가 후텐마의 미군기지 이전문제임. 그 과정에서 빚어진 내각 내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일치는 민주당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줌.

〈표 1〉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표 2〉 2010년 7월 이후 일본 국회의 세력분포

정당	민주당	국민신당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모두의당	일어서관일본	무소속	합계	
중의원	306	4	116	21	9	6	5	4	9	480	
참의원	106	3	83	19	6	4	11	5	5	242	
합계	412	6	199	40	15	10	16	9	14	722	
여야 구분	연립여당: 419		야당: 303								722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 참패는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지만,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정국운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간 정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구조적인 한계
 - 첫째,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정국운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2010년 7월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선거 전 의석이 54석에서 44석으로 줄어들어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짐. 이로써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지만,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정국 운영은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음(표 1과 표 2를 참조).

**여소 야대의 정국
상황에서 간 총리가
오자와 그룹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적인
지지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리더십 약화로
이어짐**

- 둘째, 여소 야대의 정국 상황에서 간 총리가 오자와 그룹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적인 지지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결국에는 리더십 약화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발생시켰음. 하토야마 시절에는 오자와의 눈치를 보며, 당정 간의 조정 장면이 수상의 리더십의 한계로 작용하였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오자와의 불안정한 동거를 인정하였음. 왜냐하면 오자와 그룹은 민주당 내에서 150명 정도로 민주당 전체(42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내에서 오자와 영향력은 압도적임. 오자와 그룹이 결집하면 정권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당을 쪼개 새 정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당과 합당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킬 수도 있음.²⁾ 오자와 그룹은 간 총리가 반 오자와 그룹 일색으로 조각과 당직인선을 추진하면서부터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함. 또한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간 정권에 대해 탈당의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간 총리를 위협하게 되면서, 간 총리의 정국 통제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음.
- 셋째, 일본의 경기 불황의 지속도 리더십의 한계를 가중시킴. 민주당은 공급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요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그렇지만, 경기활성화 정책은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는 급격한 후퇴와 고용악화를 가져옴. 특히, 재정적자로 인해 소비세 인상이 당면과제로 대두된 시점에서는 수상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함. 이러한 간 총리의 리더십의 약화가 결국 한일관계에서 울릉도 방문 의원들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음.

3. 노다 정권의 정치적인 변화

가. 노다 정권이 탄생하면서 정치적인 변화

- 첫째, 민주당이 비판해 온 자민당의 정권운영방식을 연달아 부활시키기 시작함. 지금까지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을 ‘관료와 유착정치’라고 비판하면서 2009년 정권 교체 후 민주당 정권은 ‘정치 주도’, ‘정책결정의 일원화’의 명목으로 관료를 배제하고 차관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폐지했음. 또한 민주당 내에도 당 정책조사회와 당 세계조사회를 폐지하면서 자민당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였음. 민주당 정권의 생각과는 달리 정치주도는 정치가들의 경험부족과 관료의 사기저하로 인한 정책결정의 혼란을 초래하였음.

- 노다 수상은 법안, 조약, 예산에 관해서는 정책조사회 회장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조회의 역할을 확대시킨 것임.
 - 형식적인 부문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정권교체로 폐지한 당세계조사회도 부활시킴. 이로써 간 정권시대에는 제언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정책조사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갖게 됨.
 - 정책결정에서 내각일원화를 지향한 종래 민주당 정권에서 본다면 정부제출법안을 당의 정무조사회에서 결정한 자민당 시대로 되돌아간 것임. 이것은 민주당이 정책결정에 관여 할 여지가 확대됨으로써 정책결정에서는 민주당 내의 합의가 중요하게 된 것을 의미함.
 - * 노다 수상은 정치주도에서 관료기구를 포함시킴. 지금까지 ‘정치 주도’에 집착한 하토야마와 간 정권의 반성을 발판삼아 관료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킴으로써 향후 동일본 대재해의 복구에 활용할 예정임.³⁾
 - 이처럼 노다 수상이 자민당시대에 행해왔던 정책결정방식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표류하는 정치 주도’를 피하기 위해서임. 노다 수상은 원활한 정권운영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민당 시대의 교훈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함.
- 둘째, 노다 수상은 간 정권과는 달리 오자와 그룹과 화해를 도모함. 2009년 민주당 정권이 발족한 이래 정권 운영을 둘러싸고 오자와 그룹과 반 오자와 그룹 간의 갈등은 민주당 정권이 표류하게 되는 원인

민주당이 비판해 온 자민당의 정권운영방식을 연달아 부활시킨 이유는 ‘표류하는 정치 주도’를 피하기 위해서임. 노다 수상은 원활한 정권운영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민당 시대의 교훈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함

〈표 3〉 민주당의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하토야마 정권	간 정권	노다 정권
당정조회장	폐지	부활 (각료와 겸무)	각료겸무가 아닌 전임으로 권한을 강화. 정부제출법안을 사전 심사, 승인.
당정책조사회	폐지	부활. 정부에의 제언 기관으로 위치설정	기능강화, 정조회장 하에서 법안을 심사
당세계조사회	폐지(정부세조로 일원화)		부활. 후지이히로히사(藤井裕久) 전 재무상이 회장으로 취임.
경제재정자문회의		사실상의 폐지	국가전략회의(가칭)를 창설
차관회의	폐지	재해대응 회의로 사실상 부활	한층 더 활용

2009년 민주당**정권이 발족한 이래****정권 운영을 둘러싸고****오자와 그룹과****반 오자와 그룹 간의****갈등은 민주당 정권이****표류하게 되는 원인임**

임. 오자와 전 대표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강제 기소되는 것을 계기로 간 수상은 오자와 전 대표를 당내에서 추출하였고, 이에 오자와 그룹은 간 수상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쌍방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음. 결국 간 수상이 사퇴를 하게 되어 민주당 정권 동안 3인의 수상이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음. 결국 민주당 내의 대립이 일본 정국의 혼란으로 이어진 것임. 2011년 8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도 오자와 그룹과 반 오자와 그룹의 대립은 표면상으로는 메니페스토의 수정과 증세, 환태평양 경제연대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가에 대한 정책 대립으로 나타남. 그 당시 대표선거에서 오자와 전 대표의 지원을 받은 가에다 전 경제산업성 대신은 메니페스토의 수정에 반대, 증세에도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간 정권과는 반대의 정책을 표명함.⁴⁾ 결국 민주당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당이 분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함.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노다 대표는 오자와 그룹을 적극적으로 표용하면서 당내 대립을 잠시 잠재울 수 있었음. 즉, 노다 수상이 민주당의 대표선거에서 ‘민주당 내에서 탈 오자와, 또는 반 오자와를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여 오자와 그룹의 신뢰를 얻음.

-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승리한 후 노다 수상은 ‘노 사이드(화해를 하자)’라고 말해 오자와 그룹의 반감을 약화시키기도 함.
- 이후 노다 수상은 내각 인선에서 오자와의 측근인 야마오카 켄지를 공안위원장으로 기용을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함. 야마오카 공안위원장은 간 내각에서도 기용설이 있었지만, 간 총리가 탈 오자와를 강조한 나머지 친 오자와인 야마오카를 기용하지 않았음. 그러나 노다 수상은 이를 역이용하여 야마오카를 공안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오자와 그룹과 화해를 만들어 감. 처음에 오자와 전 대표는 반신반의하였지만, 결국 오자와도 노다 수상이 ‘우리와 협력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됨.
- 이처럼 노다 수상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변화를 하였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과의 관계도 정권의 한계로 존재하면서 노다 정권은 국내적인 과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음.

4. 노다 정권의 난제

가. 증세: 부흥세와 소비세

- 현재 노다 정권의 최초의 고비는 대지진 이후 부흥계획과 엔고 대책을 담은 2011년도 추경 예산임. 추경 예산과 증세 법안을 12월 중에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시나리오를 노다 정권은 가지고 있음. 재무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증세를 할 생각임. 한편,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는 노다 수상은 내년 3월까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민주당 내에서 증세 반대론이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존재함. 부흥 사업에 드는 예산은 앞으로 5년간에 약 13조가 들 것으로 예상됨. 올해 7월에 간 수상이 정리한 부흥기본방침에는 우선 3조엔 규모를 생각하여 세출 삭감 등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시증세로 만들 방침을 세움. 노다 정권도 이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부흥 예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을 생각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는 재정악화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 문제임.
- 증세의 문제는 노다 수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음. 노다 수상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결정시스템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내각의 정책일원에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조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은 소비세 증세에 찬성이지만, 부흥증세에 대해서는 ‘엔고,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증세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 당 내의 증세 반대파의 존재도 노다 정권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오자와 전 대표, 하토야마 전 수상의 그룹은 메니패스토(정권공약)의 수정과 관련하여 증세를 반대함. 이는 정권 내의 주도권 투쟁과 관련되어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만약 민주당 내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 야당과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됨. 민주, 자민, 공명 3당은 8월에 부흥재원의 조달에 대해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각 당이 검토할 것을 확인함. 노다 수상은 부흥 대책, 소비세 증세,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3당 협의기구를 제안하였으나, 자민당이 난색을 표명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음. 자

현재 노다 정권의 최초의 고비는 대지진 이후 부흥계획과 엔고 대책으로 증세의 문제는 노다 수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음. 그 이유는 노다 수상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결정시스템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이는 정권 내의 주도권 투쟁과 관련하여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오바마 대통령이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에 이전하는
미일 합의 조기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다 수상은
결단을 해야 하는데,
노다 수상이 얼마나
신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함*

민당은 민주당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루 빨리 선거를 함으로써 정권을 되찾을 속셈임.

나. 외교정책: 환태평양경제연제협정(TPP)와 미일관계(후텐마 문제)

- 노다 수상은 미일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미일관계의 심화,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함. 실제 노다 수상의 말처럼 쉽게는 될 수 없는 걸림돌이 있음. 이는 후텐마문제와 TPP에 의 참가임.
- 첫째, 발등의 불은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이전하는 문제임. 9월 21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후텐마 이전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도록 노다 수상에게 요구함. 즉, 오바마 대통령은 헤노코에 이전하는 미일 합의를 조기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임. 후텐마 문제에 대해서는 수상은 ‘미일 합의에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이해를 얻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오키나와의 협력을 얻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임. 오키나와의 지역주민은 미일합의에 대해 반대를 굽히지 않아 결국 정치적인 결단만이 남아 있음. 게다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일본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 미 의회는 후텐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 오키나와 해병대의 팜 이전 비용 1억 5600억 달러를 내지 않을 방침을 밝힘. 이에 미 국무성은 의회 공청회에서 후텐마비행장의 미 공군 가테나 기지로의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지만, 현실가능성은 적음. 이렇다면 노다 수상이 결단을 해야 하는데, 노다 수상이 얼마나 신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함.
- 둘째 TPP에 대해서는 노다 수상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내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임. 노다 수상은 취임 초기의 기자회견에서 ‘정보수집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 조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함. 노다 총리는 11월 아시아태평양협력회의(APEC)정상회담에서 TPP 교섭을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를 밝힘. 그렇지만, 수상이 기용한 관계 각료는 TPP에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재임된 가노 농수산성의 장관도 TPP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대표선거에서도 ‘지금 TPP 참가를 논할 시기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함. 예정대로 농업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대책이 필요하다.

- 정부 내 심의회에서 국내 농업대책에 대한 제언은 하였지만, 이를 실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고 있어 앞으로 언제 이를 시행할지도 의문임. 벌써부터 노다 정권 내에서는 TPP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옴. 그렇지만 노다 총리는 TPP에 대한 찬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5. 노다 정권과 한일관계

- 노다 정권은 오자와 그룹과의 적극적인 화해와 국내적인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 노다 수상은 취임 초기부터 한국에서는 극우 인물로 생각되어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음.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은 이미 사면됐기 때문에 전쟁범죄자가 아니라고 한 것과, 영주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선 일본 국적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노다 총리는 취임하면서부터 A급 전범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이었고, 이제는 기존 정부의 견해를 답습할 것이라고 표명함.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공식참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함. 이는 한국과 중국이 이전의 노다 수상의 발언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로 회귀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 것임. 이와 함께 노다 총리가 국제회의를 제외한 처음 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토야마, 간 정권의 한국 중시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0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의 성과는 양국 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것임. 즉,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인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함.⁵⁾ 이번 합의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원·엔 통화스와프가 300억 달러로 확대되며, 기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신규로 3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간 달러·원/엔 통화스와프가 설정됨. 통화스와프는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포석임.⁶⁾ 이어 일본의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TPP에 대해서는 노다 수상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내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임. 노다 정권은 오자와 그룹과의 적극적인 화해와 국내적인 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최근 한일관계에서**일어난 일련의 사건은****민주당 정권이****때문에****일어났다기보다는****일본정치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측면이****강함.****일본의 '장쳐받은****내셔널리즘'으로****인한 일본 국내****정치의 갈등은****한일관계를 해치는****상황을 만들**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하기로 함.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독도·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2조 1항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의 분쟁을 협정 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함. 따라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최근 기각했다'며 '이는 모욕적 수준'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함.⁷⁾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0명의 이름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서를 보내 1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달라고 호소함.⁸⁾ 이것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외교부에게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정부 간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하면서 또다시 한일 간에는 과거사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최근 한일관계는 일본정부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으로 경색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한일관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민주당 정권이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일본정치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측면이 강함. 탈냉전 이후 일본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사의 반성과 사죄를 통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롭게 나타남. 이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위기감과 반발은 장기불황에 힘들어 하는 일본국민들에 파고들어 내셔널리즘을 자극함. 그 결과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2010년의 '간 담화'로 이어지는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한편에서는 아베 총리의 '주장하는 외교'로 대표되듯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과거지향적 우익들의 반발 또한 커지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남. 최근에는 일본 정치 내의 사회당의 몰락, 그리고 세대교체로 인해 과거지향적인 우익들의 목소리가 정치권 내의 상식으로 굳어져 감으로써 한국이 도덕적인 우위를 통해 일본을 몰아치는 모습은 벌써 사라진지 오래되었음.

- 이러한 일본정치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순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함. 우선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의 정치권의 과거사에 대한 ‘국민반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는 한국의 적극적인(감정적인) 대응과 일본의 소극적인(냉담한) 반응으로 갈등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의 울릉도 방문 의문들의 경우에는 야당 자민당이 정략적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을 몰아세우면서 독도 갈등이 촉발됨. 결국 일본의 ‘상처받은 내셔널리즘(wounded nationalism)’으로 인한 일본 국내 정치의 갈등이 한일관계를 해치는 상황을 만든 것임. 특히, 한일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파트너적인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만드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임. 둘째, 일본 정치권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한일 갈등을 축소하려는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임. 1998년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한일 협조를 중시하는 유력정치인(예를 들면 하토야마 총리, 센코쿠 관방장관 등)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국은 간 총리의 퇴진을 염두에 둔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외교에서 우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짐. 이런 상황에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정치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짐. 그래서 현재 일본의 정치권은 ‘한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정치가는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경직된 흐름이 존재함.
- 노다 수상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노다 정권 시기의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의 정국 분위기를 파악해야 함.
- 노다 정권도 하토야마 정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우선 국내정치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노다 정권으로서는 국내정치에 치중할 것임. 또한, 노다 수상 자신이 외교 문제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노다 수상은 아시아를 바라볼 때 중국과 한국을 구별하지 않고 중국과의 개선이 아시아의 협조를 얻는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면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중국을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발상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노다 정권은 한일관계에 새로운 발상을 도입하기

노다 수상 자신이 외교 문제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노다 정권은 한일관계에 새로운 발상을 도입하기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현상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음

노다 정권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음**

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현상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음.

6. 결론: 민주당 정권의 국내정치적인 제약**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한일관계**

- 첫째,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한일관계의 중요한 쟁점은 대북정책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글로벌한 이슈(예를 들면 테러)였음. 민주당 정권(특히 하토야마 수상)은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높이고자 함. 또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보수 그룹(예를 들면 마에하라 그룹)은 한국과 과거사문제를 양보를 하더라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증시하기 시작함.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포용정책, 일본은 강경정책으로 인식의 차가 많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한일 간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는 줄어들기 시작함. 따라서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그 결과 민주당 정부 이후의 한일 간의 국제적인 협력은 활발히 진행됨.
- 둘째, 시민레벨의 심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과 많은 변화를 가져옴. 한국 내의 반일 정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일본에서는 한류의 붐과 함께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90년대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서 민주당 정권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국제관계, 시민레벨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하토야마, 간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임.
 - 민주당 정권은 국제관계나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정치가 한일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한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함.
- 노다 정권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음. 그렇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음.

- 일본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함.
 - 첫째, 한국은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즉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함.
 - 둘째, 민주당과의 정책 파이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함. 현재 민주당 내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이 당면한 과제임. 특히, 민주당은 관료우위에서 벗어나 정치우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치가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은 한일관계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음.
 - 셋째, 과거사문제에서는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진창수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센터장. 도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및 도쿄대 초빙학자로 재직하였음. 국제관계 및 일본정치 관련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였음.

주석

- 1)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보냈던 한국 국민들은 3월 30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에 실망을 하였지만, 여전히 일본을 지원하는 분위기는 존재하였다.
- 2) 오자와 간사장은 과거 자민당에서 탈당한 이후 4차례나 창당과 합당을 반복한 경험에 있다. 언제 어떤 승부수로 간 총리를 흔들지 모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를 두려워해 오자와 간사장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 3) 이를 위해 주 1회, 전차관이 출석하는 “각성청 연락회의”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사실상 차관회의가 부활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노다 수상은 경제재정운영의 사령탑이 될 “국가전략회의”(가칭)도 신설 할 생각이다. 이는 자민당과 공민당 정권하에서 일본은행 총재, 경제계, 민간학자가 구성원이 되어 경제재정운영의 사령탑 기능을 한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4) 당내의 증세 반대파의 존재도 노다 정권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월말 소비세 증세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안의 결정에서는 증세 시기가 ‘2015년까지’로 되어 있다. 부흥증세에 대해서도 간정권은 ‘10조엔 정도’로 기본방침을 명기하려고 한 것에 비해 민주당 내에서 반발을 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못한 과정이 있었다. 특히 오자와와 전대표, 하토야마 전 수상의 그룹은 메니페스토(정권공약)의 수정과 관련하여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 5)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6) 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제3국에서의 일한(日韓) 기업의 협력사업과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조기에 일본과 한국이 FPA(FTA) 협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그간 물가와 화폐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해방 당시 탈퇴 수당 액면가를 그대로 지급하는 한 후생연금 가입이 확인된 다른 피해자들도 이런 처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 8) 정대협은 요구서에서 “날이 갈수록 생존 피해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가슴 속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